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4. 5. 27.

발 의 자 : 민병주 · 강은희 · 권은희  
김세연 · 김을동 · 김희국  
류지영 · 박성호 · 박윤옥  
박인숙 · 서상기 · 신경림  
신의진 · 이예리사 · 이장우  
이한성 · 장윤석 의원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격리 조치 대상 동물은 법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상해를 입은 피학대 동물에 한정되어 있으나, 이것은 상해를 입지 않고 학대 당하여 고통을 당하는 동물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에 의한 학대에 대해 격리 보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피학대 동물의 격리 조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4조에 근거하여 3일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3일 이상의 어느 시점에 피학대 동물을 다시 소유주에게 반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

이 경우 동물 학대 행위가 재발할 확률이 높고, 피학대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음.

따라서 동물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방치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규정하고, 피학대 동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어 위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막고자 함에 개정안 제안의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등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2항 제4호).

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에 대한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동물보호감시원은 법원에 대하여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해당 동물이 소재한 시. 군. 구 또는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민간단체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 2 신설).

다. 제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8조제4항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벌을 강화함(안 제46조 및 제47조).

## 법률 제 호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등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격리하여야 한다”를 “격리(이하 “격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소유자가”를 “수의사나 동물보호감시원의 격리보호 연장 청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유자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학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소유자가”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동물의 소유권 제한)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에 대한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동물보호감시원은 법원에 대하여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소유권 등'이라고 한다)를 해당 동물이 소재한 시. 군. 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민간단체에

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동물의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동물의 소유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이유로 당해 동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제46조제1항 중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제8조제1항의”로, “1년”을 “3년”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제4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  
외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  
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  
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제2  
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  
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  
-----  
-----  
-----  
-----  
-----  
-----.

1. -----  
-----  
-----수의사나 동물  
보호감시원의 격리 보호 연장  
청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가-----  
-----

2. -----  
-----  
-----  
-----법원의 판결에 의하  
여 학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  
고 소유자가-----

②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동물의 소유권 제한)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에 대한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동물보호감시원은 법원에 대하여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소유권 등'이라고 한다)를 해당 동물이 소재한 시. 군. 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민간단체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동물의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동물의 소유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이유로

<p>제46조(벌칙) ① <u>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u> 규정을 위반한 자는 <u>1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u>&lt;신 설&gt;</u></p> <p>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1. ~ 3. (생 략) <u>&lt;신 설&gt;</u></p> <p>⑤ (생 략)</p> <p>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u>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u></p> <p>2. ~ 15. (생 략) ②·③ (생 략)</p>	<p><u>당해 동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u></p> <p>제46조(벌칙) ① <u>제8조제1항의</u>----- ----- ---<u>3년</u>-----<u>3천만원</u>-----.</p> <p>② <u>제8조제2항 및 제3항의</u> 규정을 위반한 자는 <u>1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u></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제47조(과태료) ① ----- ----- ----- -----.</p> <p><u>&lt;삭 제&gt;</u></p> <p>2. ~ 1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	--